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전망

구 병 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상이나 문제점 그리고 추구해야 할 미래적 과제에 대해서는 숱한 분석이나 논란 그리고 방향탐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수년 전의 교육개혁심의회나 교육정책자문회의 그리고 근간 다양한 방향 제시를 서두르고 있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사회 내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도하는 각종 세미나·공청회 및 워크숍의 내용들이 대학 교육개혁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동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집중적 연구들도 모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의 일환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가오는 21세기를 조망하면서 구상된 한국 대학의 미래상이 명료하게 그려진 청사진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러한 조감도를 가정하면서 이에 접근해가는 갖가지 방향이나 전략은 무성하게 제안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왜곡되어버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본질성을 회복하고 대학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주장과 의견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수없이 제기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대학사회의 지배적 여론을 수렴하여 많은 총장들이 협의·결정한 바 있는 『대학발전 10개년 계획』(1992)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10대 발전 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 대학의 교육연구체제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과 특성개발
- 학생선발 및 정원관리의 자율적 운영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현대화·합리화

- 수업과 연구기능의 현저한 신장
- 학생복지와 캠퍼스 환경수준의 향상
- 시설·설비의 현대화
- 도서관·전산소의 확충과 기능 강화
- 대학행정과 지원에 있어서의 봉사체제 확립
- 대학간 협동, 산·학·관·연의 협력 체제 정착
- 대학평가체제의 강화와 그 정착

이 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각 대학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키로 동의한 것이므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성취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21세기 초기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모습은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사회의 희구이며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그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다. 다행히 근간 정부(교육부)가 발표하고 있는 갖가지 개혁방안이나 교육개혁위원회의 정책대안들이 모두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기가 가기 전에 엄청난 변화가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이 굳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본래 역사란 합리성이나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대학상을 뚜렷이 그려내고 명쾌한 전망이나 가정을 하는 것은 이상적 역사관이나 학문적 오만으로 치부된다. 너무 거창한 비유가 되겠지만, 칼 마르크스는 산업이나 자본주의체제가 앞서고 있던 영국이 먼저 공산화될 것으로 예견했는데 맞지 않았던 사실이 자주 거론되기도 한

다. 또 대학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주장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71년 고등교육의 대중화단계 과정(elite → mass → universal)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유명해진 Martin Trow가 유럽 고등교육의 미국형 확장 과정을 예언한 바 있으나, 후일 그 오류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함께 수정론(유럽의 계급적 교육체제와 출산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외에 70년대에 미국 고등교육 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예견한 David Riesman의 이론과 예측이 빗나가고 오히려 미국의 대학생 인구가 크게 증가한 사례 등 여러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와 유기적 연계를 지니고 또 상황변화나 갖가지 변인들에 얽혀있는 교육의 미래상에 대한 가정은 어려운 일이며, 모든 예측과 가설들은 선행조건의 충족이나 새로운 변인을 외면한 기존의 틀 안에서의 추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200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변화상을 예견하면서 비교적 분명한 새로운 추세와 경향성을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분야(대학정책, 운영 및 지원체제, 학생의 위상)에 걸쳐 10년 후가 되는 21세기 초의 변화된 대학교육상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 2. 자율성의 신장과

### 경쟁체제의 정착

교육의 민주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소리 높여 외쳐온 지도 십수년이 넘었고 이러한 여망들이 결집되어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도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

다. 그러나 대학인들은 아직 폐단 많은 총장직 선제나 물의가 계속되고 있는 납입금 자율화 외에는 별로 자율화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자율성 신장을 되풀이 강조하면서도 자율로 인한 혼선과 무질서를 걱정한 나머지 관계법령을 크게 손질하지 못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것도 없이 자율은 대학교육의 지고한 전통이며 대학의 본질적 속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정치 사회적 격동을 겪어온 지난 30년 동안 각종 법령을 통한 대학교육에 대한 규제와 제약들의 폐해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획일적 규제들이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창의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각 대학의 특성을 퇴색시키면서 대학의 자율역량마저 위축시킨다는 해악과 폐단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개혁을 연구·심의하는 역대의 조직이나 정부 자신도 개혁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일부 대학의 자율역량을 빙자하여 대담한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와 자율화가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추세이며 역사적인 당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소의 우여곡절과 완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래의 대학들은 오랜 세월동안 짓눌려온 관계적 속박이나 외세에서 벗어나 창의적 발전이나 융통성 있는 학사질서를 스스로 규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은 확실하다.

미래의 대학에 높은 수준의 자율이 보장되고 각 대학이 이를 무리없이 소화할 때, 지금 우리 대학교육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각 대학간의

역할분담이나 특성화, 자구노력의 활성화 및 대학간의 경쟁체제는 그 하위체제로 스스로 정착되고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모습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양화되어 자기정체성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친 대학들의 회구가 충족되어 대학사회는 필요없는 긴장이나 부담 및 속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각 대학은 창의적 발전이나 실정에 알맞은 학사운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다.

자율에는 책임과 함께 역기능도 수반된다. 각 대학들은 대학운영의 자율화에 앞서 그 역량을 축적하고 그동안 타율에 안주하던 자세나 습속에서 벗어나 수준높은 자기통제나 자율규제의 의지와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경륜과 지혜를 집약해가야 하는 과제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자율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입장에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묻혀 방황하면서 대학이 기능을 잃고 끝내는 존재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대학을 선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다소간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대담한 자율성의 부여가 오히려 대학들의 자율체계 정비와 자기통제를 촉구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율화된 대학교육은 대학교육 전반에 갖가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극과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대학의 내·외부에 걸친 바람직한 경쟁체제를 유발한다. 사실 자율

화의 개념에는 경쟁유도라는 필수적인 부수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각 대학이 학내·외적인 경쟁체제가 정착될 때 각 대학은 물론 학내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의 부서에서도 새로운 발전지향적 자극과 창의적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력이 없고 보수적이며 진부하다'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뿌리치고 대학의 생명력과 활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본다. 미래의 대학이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자율성의 신장과 경쟁체제의 정착을 위해 각 대학은 보다 충실한 훈련과 기법을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비하지 못할 때 큰 시련과 충격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 3. 대학권의 형성과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위와 같은 자율성의 신장이나 경쟁체제가 확산되면 모든 대학은 정부의 보호막이나 핵우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자립자존을 위한 위협과 부담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을 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 존립이나 자기성장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확산되는가 하면, 지역사회를 비롯한 많은 관련기관들과의 호혜적 협력에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지방의 국립대학의 경우는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지방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각 지방의 학술문화적 기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앞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경우 그

대학권 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 예를 들면 입학조건의 완화나 학비감면과 같은 배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지방문화 및 산업기술의 수준 향상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육기능과 아울러 연구개발기능이 주변의 지원을 받으면서 크게 강화되고, 다양한 권역별 산·학 협동이 정착될 전망이다.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산재하는 여러 국립대학의 연계성 또는 통합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없지않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우수학생 유치와 모집정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사립대학간의 상보적 협력이나 운영난에 봉착한 소규모 대학간의 통합 및 폐합 등도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규모 이하의 사립대학들은 색다른 특성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지금과 같은 일부 개인 위주의 학교법인 구성도 여러 기증자를 영입해야만 하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안주나 방만한 지원체제로서는 극심한 경쟁을 극복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중앙정부의 관주도적 대학 정책에서 연유되었기 때문에 보다 민주화되고 자율화된 미래의 대학교육에서는 다양성과 독자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은 국립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연계체제가 형성될 전망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의 경우 대학 스스로 공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적인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이

며 수도권 중심의 의식구조와 행태적 특성이 강하다.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및 산업의 중심지이며 지나치게 인구 집중지역이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모든 분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역대정권의 수도권 인구 억제책이나 지방 발전책은 구두선에 그쳤고, 지방대학 육성이란 구호와는 달리 수도권은 아직도 대학교육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근래 몇년간 오랜 숙제이던 지방자치시대를 내다보면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각 지방의 권역별 산업단지가 형성되는가 하면 최첨단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단지가 설치 또는 준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순조롭게 치러진 이후에는 지방정치나 문화시책 그리고 산업이나 교육적 측면에서의 큰 변화와 탈바꿈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전환기는 필경 지방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소는 결맞지 않은 비유가 될 수도 있으나, 미국의 주립대학 발전이나 고등교육이 주정부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들은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나 산·학 협동 강화에 좋은 선례로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4. 학생소비자 시대의 도래

1970년에 세계적인 사회학자이며 문명비평가인 데이비드 리스만(David Riesman) 교수

는 『학생소비자 시대의 대학』이란 저서를 통하여 학생소비자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바 있으며, 그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대학교육 체제나 학생들의 위상에 큰 변화를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생소비자 시대’(students consumerism)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학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므로 오랫동안 대학입학을 애원하고 그 권위나 교권 앞에 복종만 해오던 학생집단이 고객(clientele)으로서의 선택권과 권익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교육시장에 대한 판로탐색(marketing)이나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게 되는 대학교육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학운영의 중심체제가 전통적 대학시대의 운영자 중심에서 교수단 중심으로 이행해 왔고, 이제부터는 학생중심 체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미래 전망을 대학 존립의 역학적 차원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게 되고, 대학교육의 내용도 주로 교수단의 주관이나 필요에 따라 편성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회귀와 성향 및 입장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대학 운영의 주요 재원이 되는 학생수의 확보가 절대적인 존립의 기반이 되며, 찾아와 애원하는 학생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학생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경제논리가 대학교육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거의 적중하여 미국 각 대학의 학생 모집 경쟁이나 일본 대학의 교육내용 개편 및 유럽 각국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위상변화로 변모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고 거의 보편화 단계(동 연령 인구 집단의 50% 이상이 고등교육기관에 수학하는 수준, Martin Trow)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대학의 정원은 매년 증가하여 신입생 규모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해당 연령 인구는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아직은 재수생 집단(25만 명 수준)으로 인해 매년 과급 현상이 일어나 입시경쟁이 유지되고 있으나, 21세기에는 적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취업구조에 변화가 오고 대학교육에 대한 가수요 현상이 정상화되며, 교육시장 개방으로 외국 대학이 유입해 오는 경우 상당수 대학의 학생모집에 새로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대학교육의 윤리성이나 사회선도적 기능 및 대학공동체로서의 교학질서나 사제관계 등 대학교육의 오랜 전통이나 그 가치 지향성이 무시된 채 대학이 경영적 측면에서만 변신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학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존립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학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를 기업형 대학(complex enterpriess)이라 부르고, 교육시장을 내다보며 교육의 부가가치를 논의하게 되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과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이나 그 속성 및 고유한 질서를 잘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추세나 상황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생소비자 시대로 불리우는 대학교육의 특징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서비스의 질과 양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질의 교육서비스만이 많은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성있는 학풍을 정립하고 그 학풍과 특성에 알맞은 학생집단을 수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특화 영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오랜 전통이나 사회적 신뢰를 얻은 대학들은 광범한 분야의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대학들은 특정 교육서비스의 전문점으로서의 특성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학생들의 위상이 크게 변화하여 소비자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므로 건진하고 바람직한 많은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의 학생복지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 넷째, 대학간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그 역할 분담에서 소외된 대학들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간의 경쟁이 극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끝으로 대학운영 전반에 봉사적 지원체제와 아울러 기업에서의 생산성 제고 전략이 대학경영면에 적용될 전망이며, 이미 이러한 성향은 선진국 대학에 크게 보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60년대에 세계를 휩쓴 각국의 학생운동은

다양한 현실적 이슈도 제기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나친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의 해방과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참여라는 주장이 공통적인 기초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주도권에 의해 기획된 자주강좌의 개설이라는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참여 및 수업 필수 이수요건의 완화에 대한 요구 등이다. 또 교수들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와 아울러 심지어는 교수요원들의 채용이나 승진에까지 학생들이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무성하였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하여 많은 대학의 관리 당국이나 교수단은 계속 타협의 진통을 겪으면서 그 요구들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세계적인 학생운동의 대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구 출산율의 저하와 70년대의 대학진학 동향의 정체 등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시장 지배력에 대한 학생집단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징조였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대학 생존을 위한 중대한 재원이기에 고등교육 시장은 종래와는 달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중심의 판매시장에서 이를 골라 살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구매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강하고 대학 진학이 성공의 관문으로 여겨지며 아직도 대학 입학정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너무 성급한 진단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 변화와 함께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위상이 크게 바뀌게

될 것임은 확실하다.

그 첫째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대학입시 경쟁률의 점차적인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인 학생 자원의 입장변화이며, 다음은 대학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 또는 전통적 모순이나 구질서의 개혁에 따른 학생들의 비중 및 그 입장 존중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대학 존립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교육에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인간적인 대우와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소홀했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 대학에 이데올로기 지향적 집단이 남아 있고, 때로는 이들이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교학질서를 파괴하면서 마치 모든 학생의 대표인 양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학생중심적 개혁이란 많은 함정과 위험을 동반한다. 따라서 원천적인 상황변화와 특수성 있는 현실 이슈로 인한 학생운동의 측면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세계적 사조라 할 수 있는 학생소비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대를 일반적으로 조망한 것일 뿐, 정치사회적 안정이나 민주적 발전을 전제로 한 가정임을 밝혀둔다.

## 5. 맺는 말

위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상을 대학교육의 규제완화, 외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학생들의 위상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설적

으로 전망하였으며, 여타의 변화와 개혁은 모두 여기에서 연원된다고 본다.

많은 대학인들은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기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도 학생인구의 감소로 입시경쟁이 사라지고 일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Riesman의 우려가 기우가 되었듯이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지원자의 절반도 못 되는 인원을 대학에서 수용해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입시의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엄청난 잠재적 대학교육 수요자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에서와 같이 성인교육(adult education),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또는 회귀교육(recurrent education)의 기회가 확충되어 보다 성숙한 새로운 학생자원을 맞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환기에 먼저 의식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와 같은 입시경쟁률에 관한 우려는 대학 당사자들의 우려일 뿐, 국민의 입장, 수험생의 처지에서는 얼마나 바람직한 변화인가? 많은 지원자가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 또는 우월감을 느껴온 대학들의 자세는 일종의 오만이며 비정한 횡포에 다름아니다. 우리 사회의 입시지옥과 그 폐단이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현실인가를 대학인이 먼저 걱정해야 할 일이다. 선진국처럼 극히 일부 대학만이 입시경쟁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원자 모두를 합격시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교육적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장래성 있는 젊은이들을 대학입시라는 질곡으로 짓누르고 고문해 왔으며 어떤 일에서 큰 성

취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재목들을 거리에 대책 없이 버려 버리는 우를 범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순이며 오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학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스스로 해결되는 상황을 맞게 됐으니, 필자를 포함하여 이 일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은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과 함께 무엇을 탓하기에 앞서 회한과 자책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이런 전환기를 거쳐 보다 성숙한 2000년대에 보편화된 대학교육은 결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의 특권이 아니고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지닌 모든 젊은이와 때를 놓친 성인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제는 제발 학업성적 몇 점을 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속단하는 높고 낮아버린 기성세대의 척도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심판하지 말자. 성적 좋은 학생만 받아 세칭 일류대학이라고 안주하지 말고 성적 낮은 학생들도 입학시켜 더 큰 폭으로 개발(부가가치의 최대화)해내는 인간중심적인 대학교육이 아쉬운 것이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며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다양한 재목으로 고루 쓰시기 위해 똑같은 권능을 부여 하셨음’을 상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

---

구병림/연세대에서 교육학 석사, 건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교환교수, 대교협 전문위원 및 고등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과제”, “대학교육의 변화추세와 학생소비자 시대를 위한 대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